

# 학생들 삶을 지키자고 다시 손잡다

교육의향

윤영백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살림위원장



최근 제보가 부쩍 많아졌다. 조기 등교, 강제 학습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사립 중심으로 일선 학교들이 경쟁하듯 등교 시간을 앞당기고 있다. 이는 광주시 교육청이 올해 초 '정규 수업 이외 교육 활동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을 때 예견된 일이다.

기본계획은 정규 수업 이후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여 학생 건강과 행복을 지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지침이다. 학생 건강을 '실력 광주'라는 허울 아래 빨아내며 끌어 가는 입시 병폐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의 투쟁으로 세워진 최소한의 울타리라 말할 수 있다.

울타리를 허물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격렬한 비판이 이어졌고, 기본계획을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런 요구에 꺾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맞서기 위해 '광주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가 2023년 3월 9일자로 교육청 마당에서 출범하게 되었다.

'삶을 지키다'는 가장 원초적인 요구로 명명된 깃발 아래 손을 잡은 단체는 75개에 이른다. 생존 의제가 교육청 마당을 울리는 토대 위에서 다룰 수 있는 교육 의제는 얼마나 초라하고 허구적인 것인가? 게다가 특정 의제로 시민사회가 이토록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데, 이를 다독이거나 풀어주는 교육청의 언어는 너무 빈약하다. 그간 면담에서 확인한 교육청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반학벌 = 학벌없는사회)

(반학벌) 기숙사 활성화, 기본계획 폐지, 365카페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다. 소위 '실력 광주' 담론 안에서 수능 1등급 비율 높은 광주, 명문대 입시 잘하는 광주로 가려는 것 아닌가? (교육청) 교육감님은 실력을 입시 능

력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있으시고,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강조하는 교육 신념이 확고하다.

(반학벌) 교육감 능력을 입시 성과로 평가하려는 일부 언론의 언어가 노골적이고, 이런 욕망을 가진 학부모도 많다. 이런 욕망을 성찰하는 힘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감 신념과 무관하게 이런 현실에 끌려가기 쉽다는 것이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교육감에게도 이득이고.

(교육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함께 봐주면 좋겠다. 또 '폐지'라는 말을 써서 마치 어떤 계획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전교조와 맺은) '단협안'이 그대로 살아있고, 오랫동안 뿌리내린 문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반학벌) '단협안'과 '기본계획'은 내용도 다르고 위상도 다르다. 이번 사안 쟁점이 되는 현장은 '고등학교'이고, 특히 '사립'인데, 이들은 그간 '단협안은 노조와 교육청이 맺은 건데,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 현상들이 사라지다가 될 것이다.

또한, 기본계획은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구도를 기본으로 하지만, 단협안은 '노조원과 학교장'의 구도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교육청)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다. (반학벌) 이 사안 관련 정책국장의 행정감사 답변을 보면, 지침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로 '등교 시간', '주말 자율학습' 등을 들더라. 교육청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 아닌가?

(교육청) 전체적으로 '학교 현장의 자율화'를 강조하는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교육청이 그간 갖가지 지침을 만들어온 탓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육청만 쳐다보고, 학교장이 현장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잃고 있어서, 이런 확실성을 해소하고,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해나가야겠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번 조치도 그런 확립

성을 해소하는 흐름으로 이해해달라.

(반학벌) 어떤 지침을 한 가지 속성으로 말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마스크 착용은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을 위해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지침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했을 때,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 이 때는 '이제 자율에 맡긴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지침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보호막을 깨면서 '이제 자율에 맡긴다'고 하는 건 넌센스다. 보호막이 잘 작동하니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도.

(교육청)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걱정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해도 늦지 않다.

(반학벌) 순서가 바뀐 말이다. 무수하게 이미 일어났던 피해를 막기 위해 간신히 보호막이 만들어진 건데, 보호막을 없애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대응하잖나.

(교육청)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다. 학교 현장을 함께 돌아보자고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다.

(반학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원래대로 두면 되지 않나. 분명한 건 '기본계획 폐지' 운운 자체가 안 그래도 이걸 어겨왔던 일부 현장에 자극적인 시그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도 바꾸지 않는 상황 자체가 '교육청이 입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교육청의 이익으로 삼고 싶은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떤 행정을 하거나 안 하면 '얻는 것'이 생기고, '잃는 것'이 생긴다. 지금 공론의 장에 '잃는 것'은 설명되어 쌓이는데, '얻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호하다.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밀고 나가는 행정은 어리석고, 얻는 것이 무엇인지 감추면서 밀고 나가는 행정은 음흉하다. 시민사회가 쟁취해서 누렸던 세상이 잠깐 뒤로 당겨질 수는 있지만, 뒤로 당겨진 힘은 더 강하게 앞으로 갈 힘이 될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社說

### 2차 공공기관 유치, 시너지 극대화 초점

#### 시·도, 유치전 본격화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추진에 맞춰 광주시와 전남도가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2차 이전계획을 상반기중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유치 활동을 구체화했다. 광주시는 한전인재개발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35개 기관을 유치 대상에 올렸다. 전남도는 전국 최대 규모인 농수산업 및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기관이 최우선 목표다.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수협중앙회·수협은행, 지역 난방공사 등 50여 개를 유치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농·수협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에 두도록 한 농·수협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다. 광주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가 공공기관 유치 시·도 전략 회의'를 열어 유치원칙과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1차 이전 기관인 한전과 연계된 이전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를 키우는 이전 등 2차 공공기관 유치의 큰 틀을 제시했다. 한데 강 시장이 이 자리에서 "광주 군 공항을 무안공항에 통합시켜 그곳에 한국공항공사를 유치하겠다"고 말한 것이 무안군민들의 반발을 샀다. 무안군민들은 10일 광주시청앞에서 반발 집회를 갖고 "강 시장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를 무안으로 정해놓고, 무안군민을 자국하려고 합평군민과 영광군민 등을 이용했다"며 "전남도민, 무안군민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전남도와 협의해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해당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발언"이었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현재 전국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붙은 상황에서 이같은 지역내 불협화음은 치명적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때와 달리 비혁신도시 지자체들도 "인구감소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있어서다. 지역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고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로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알짜기관을 유치하는데 지자체의 전략적 협력과 지역 역량 결집이 절실한 상황이다.

### '민식이법' 3년...시행전보다 사고 늘다니

#### 광주 스텝존 교통사고 49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흘렀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과속 차량에 치어 숨진 어린이의 희생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관련법에 따라 차량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되고 신호등과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이 늘었지만 등·하교길 어린이의 안전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텝존)내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5.5건에 이른다. 연도 별로는 2018년 28건, 2019년 40건, 2020년 47건, 2021년 63건, 2022년 49건이다. 지난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텝존내 교통사고가 법 시행 전보다 되려 늘고 있는 셈이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16건, 2021년 20건, 2022년 13건 등으로 3년간 전체 스텝존 사고의 31%인 49건에 사

상자수는 52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텝존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미흡한 시설 탓이 크다. 당장 광주의 경우 등하교길 안전한 통행을 위한 보행로가 마련되지 않아 학부모의 걱정과 불안이 좀체 가시지 않고 있다. 현재 광주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157곳으로, 이 중 39곳은 통학로에 인도가 일부만 설치됐다. 5곳은 통학로에 인도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도로 노면이 노후돼 속도제한 표시의 식별이 어렵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도 제각각인 탓에 운전자가 혼선을 겪는다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인식 전환이다. 아무리 좋은 법규와 시설을 갖췄더라도 운전자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관계 당국은 운전자의 준법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스텝존 사고 다발 지역의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 개선에도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학교 앞 속도 30km 이하,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은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 서석대



얼마 전 회사 초청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강의를 했다.

워낙 말을 잘 하는 사람이니, 1시간 남짓 강의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났다. 결국 핵심은 민주당의 '단합'이었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 할 일 하는 것'이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역에 예산을 따오는 것'이다. 과거 광주시청에 출입할 때 일이었다. 고위 공무원들이 예산을 배정받는 시기가 되면 기재부 앞 여관에다 진을 친다고 한다. 매일매일 들어가 지역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다리고, 다시 또 설명하고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이들은 거의 읍소에 가까운 표정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타지역은 그림이 좀 다르다. 지역 공무원들이 올라오면 국회의원 측에서 제일 먼저 움직인다. 어찌됐던 지역 예산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아는 사람들은 말한다. 대한민국의 지역정부 예산 배정은 '힘의 크기 순'이라고.

여기서 힘의 크기란 국회의원들을 지칭한다.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 순번대로 배정을 해주다보면 점점 줄어들어 아래로 갈수록 가져갈 것이 없어진다. 힘이 큰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당연지사다. 물론 십수년 전 이야기니 지금

도 그러할까 싶지만 박지원 전 원장은 강의에서 일갈한다.

"이번 광주, 전남 예산이 몇% 올랐는지 다른 곳과 비교 한번 해 봅시다. 여기가 작습니까? 광역지자체들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선택하는 이유는 지역을 좀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함이 제일 첫 번째다. 이 첫 번째를 뒤로 미뤄 놓을수 있는 일도 있긴 하다. 독재와 압제가 있을 때는 풍요를 잠시 내려놓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대신해서 약삭같이 싸우는 것을 바라때다.

#### 1년 남짓 남았다

자, 정리해보자. 여기 두 가지 항목을 이야기하면서 독자들의 머리 속에 살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떠오르는가? 아니라면 다음 선거에서 바꿔야 한다.

정치 별거 없다. 정당들끼리야 어떤 복잡한 수를 쓰던지 관심없다.

그저 이 미친 물가와 유가 폭등, 감당하기 힘든 공과금, 그리고 68시간을 일하고 몰아서 쉬라는 어처구니 없는 노동 체계가 지속될런 지가 더 궁금하다. 그것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서민들이 바라는 정치다.

총선까지 이제 1년 남았다. 굶주린 민중은 태풍보다 더 무섭다고 했던가. 태풍이 누구에게 갈지 필 자역시 주린 배를 움켜쥐고 지켜 볼 터다.

노병하 사회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정치부 (062)510-0461 사회부 (062)510-0340 경제부 (062)510-038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전남취재부 (062)510-0336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